

“광주·전남 해외독립운동가 지자체 차원 전수조사해야”

90년 전 美서 별세한 고(故) 정원도 선생 유해 못찾고 훈장도 계류 김재기 전남대 교수 “지역 출신 수만 명...서훈 추서 120여명 그쳐”

서훈을 받지 못하거나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광주·전남 출신 해외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당수의 이 지역 출신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이 빛을 보지 못한 채 잊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1일 광주 시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원에서 열리는 ‘2023문화아카데미’ 강연에 앞서 광주·전남 출신 수만 명이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고작 120여 명이 서훈을 추서받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광주 출신이자 해외에서 망명하며 독립운동해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 고(故) 정원도 선생에 주목했다. 정 선생은 1880년에 태어나 1905년 전후로 미국으로 망명, 미국 대한민국민회에서 활동했다. 1912년에는 대한민국민회 기관지인 ‘신한민보’ 주필 겸 편집인을 맡았으며 수차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다 1932년 뉴욕에서 별세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정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으나 국가보훈부는 8년째 계류중이다. 90년이 지나도록 정 선생의 유해 위치는커녕 후손조차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아직도 상당수의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정 선생처럼 행적·기록·후손 등을 찾지 못해 공훈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1년에 걸쳐 보훈부 및 일본·미국·멕시코 현지 자료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일본 지역 30여명, 미주 지역 300여명, 멕시코·쿠바 지역 30여명의 광주·전남 출신 해외 독립운동가가 서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추정이다.

실제로 김 교수는 지난 6월 쿠바에서 활동한 해남 출신 독립운동가 주한욱 선생의 가족을 발굴해 보훈부에 계류 중이던 서훈을 전달했다. 최근에는 해남 출신이자 멕시코에서 최소 17차례 이상 독립운동 자금을 후원한 허재호 선생의 기록과 그 손자



안창호(맨 왼쪽) 선생과 정원도(왼쪽 세 번째) 선생.

루이스 올센씨를 찾았는데, 허 선생 또한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교수는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오는 8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숨겨진 광주·전남 출신 해외 독립운동가를 찾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발굴 작업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말이다.

보훈부의 조사가 해외 교민사회 활동 기록, 제보, 사료 등을 수합한 뒤 조사를 시작하므로 조사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이 지역 독립운동가를 찾는 일인데, 보훈부에 일임하기에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광주시에서 나서서 국가보훈부 사료와 재판자료, 사찰자료, 본적 정보 등을 전수조사해 이 지역 미서훈자 및 후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국·전세계적으로 발굴 사업을 진행 중이며, 효과적인 발굴을 위해서는 제보나 사료 등 객관적 자료가 모여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자료 발굴에 나서 지원해 주면 미서훈자·후손 발굴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북 장수·진안 규모 3.5 지진...아파트 외벽 균열

전북 장수군에서 규모 3.5에 달하는 지진이 감지됐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남 오후 7시 10분께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인 장수군 천천면 인근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까지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피해신고는 4건이 접수됐다. 장수군과 진안군에서 각각 2건씩 지진 피해가 발생했다.

장수군 장수읍과 계남면에서 담장에 균열이 생겼

고, 진안군 진안읍에서는 외부화장실과 아파트 1층 외벽에 균열이 생기는 피해를 입었다.

장수군에서 발생한 지진은 타지에서도 감지돼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30일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52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전북에서 43건이 접수됐고, 경북 4건, 경남 2건, 충북 1건, 부산 1건, 전남 1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죽어서도 일본 사과 꼭 받으리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 화순 출신 김재림 할머니 별세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동원된 김재림(사진)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3세.

또 한 명의 전남 출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를커녕 배상조차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일제강제동원 시인모임은 30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 원고로 나선 김 할머니가 이날 오전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태평양전쟁 당시 한국인을 강제 노역에 동원해 노역을 시킨 일본 군수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피해자다.

그녀는 지난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해 2018년 12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 소식을 기다리다 결과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김 할머니는 1930년 화순군 능주면에서 1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불행은 1944년 화순군 능주초등학교(옛 능주공립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광주시 동구 불로동에 있는 삼촌집에서 가사 일을 돕던 그 해 5월에 시작했다. 평소 공부를 하고 싶었던 그녀는 일본 모직책이 일본에 가면 ‘밭도 배부르게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일본으로 향했고,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14살의 나이에 온종일 군용 비행기 부속품을 만들고 비행기 동체에 페인트칠을 하는 등 혹사를 당했다.

김 할머니는 생전 “미쓰비시에서 하루종일 군용 비행기의 부속품을 깎는 일, 비행기 날개에 페인트 칠을 하는 일을 했다”며 “하루 종일 기계에 매달리다 저녁에 숙소에 돌아오면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피곤했다”고 회상했다.

1944년 12월 7일 김 할머니는 ‘도망가라’는 고함소리를 듣고 함께 있던 사촌언니의 손을 잡고 공장에서 도망쳤다. 김 할머니는 무너지는 건물에서 사촌언니의 손을 놓치고 건물더미에 깔렸지만 구사일생으로 구출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촌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김 할머니는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일

본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따가운 사회적 시선을 받아야 했다.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던 것이 군 위안부에 동원된 것으로 오해받을까 두려워한 순간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했다고 한다. 중노동과 굶주림에 시달린 후 해방 이후에도 어렵게 살아온 그녀는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후 김 할머니는 2014년 2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했지만, 아직 배상을 받지 못했다. 지난 4월 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김씨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판결 불복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지난 2018년 12월 이후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한편 김 할머니 빈소는 광주시 서구 매월동에 있는 국민장례문화원 40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다음달 1일 오전 8시 30분이며 장지는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이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중노위 “부당해고 아니다”...광주보육대체교사 반발

“부당 해고 면죄부” 행정소송 예고

광주보육대체교사들의 해고를 두고 부당해고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결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뒤집혔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노조)는 2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의 불공정한 판정에 불복하며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중노위가 2차 심문위원회를 열고 지

난 4월 광주보육대체교사들의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한 지노위의 판결을 뒤집은 데 따른 것이다.

지노위는 3년 넘게 4차례 근로 계약을 체결해 왔고 이를 사회서비스원도 인정했다고 보는 ‘갱신 기대권’을 근거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지만 중노위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판단에 따라 재심 신청은 기각됐고 지노위가 판결과 함께 언급했던 보육대체교사 일부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등의 주문도 취소됐다.

노조는 “현재 근무하는 보육 대체교사 48명 중 41명이 내년 또 해고를 앞두고 있어 반복된 보육 현장의 해고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중노위는 불공정한 심판을 내려 광주시와 시 사회서비스원의 부당 해고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판결문이 공개되는 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는 올해 1월 13일을 시작으로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199일째 속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학생인권조례 한 글자도 건드리지 말라”

광주교사노조, 조례 보완 반대

정부와 광주시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 조례 보완을 검토하고 나서자 광주교사노동조합(노조)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30일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광주 학생인권조례는 단 한글자도 건드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발생한 서울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이정은 광주시교육감도 인권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는데, 인권조례가 있는 광주시는 조례가 없는 시도 교육청보다 교권 침해 사례가 오히려 적었다”고 지적했다.

노조관계자는 “44개조로 이뤄진 광주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라는 단어가 총 182번 등장하는데, 학생 대신 학생의 이름을 넣어 읽어보면 그 뜻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산재 사망 23일만에 장례식

사측 사과·재발방지대책 합의

20년 터울로 산업현장에서 숨진 아들(7월 12일자 광주일보 7면)에 대한 장례식이 23일만에 치러졌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노조)는 “이달 3일 혼자 선박블록 해체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A(40)씨 사고에 대해 원정업체 ㈜유일과 하청업체(유)형도가 지난 27일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유족과 합의해 고인의 장례를 치렀다”고 30일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